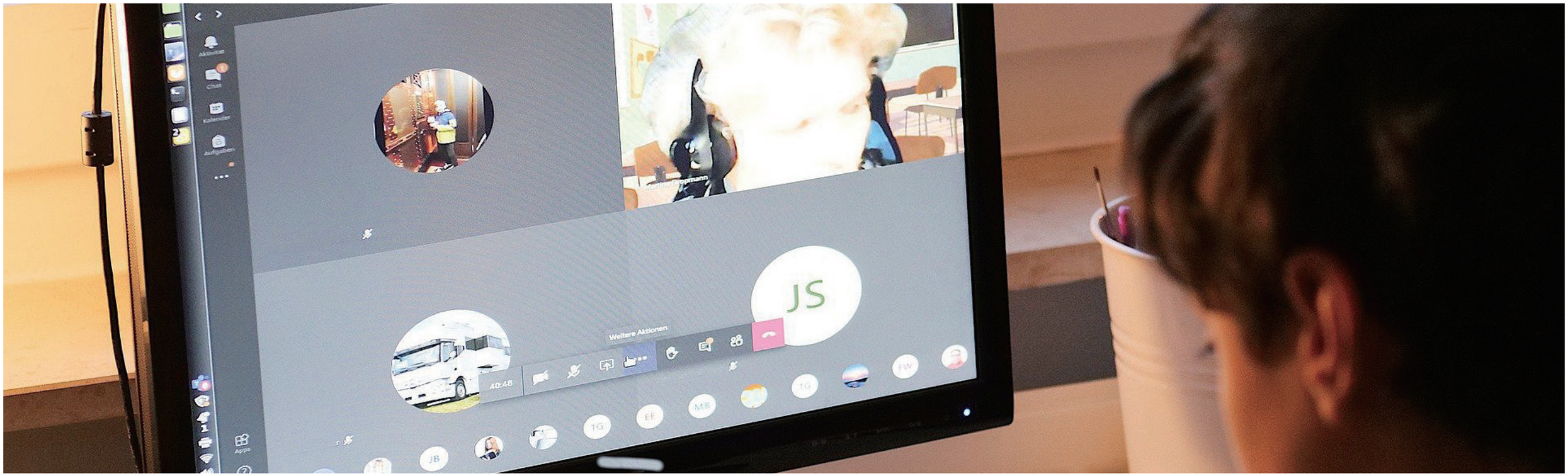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비대면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심화되는 교육격차, 소득 불평등이 부채질

강 경 숙
원광대학교 교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교육의 방향도 대면에서 비대면 디지털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의 격차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는 중등 교육을 마친 학생을 흡수하고 육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인 우리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학교도 교육 격차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반적인 교육의 위기다. 코로나19 이후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우리 신문은 이를 완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전하고자 한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의 교육격차 및 불평등 심화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세계교육현황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GEMS)'는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취약성이 더욱 심화된 점을 부각하고, 배경, 정체성 및 능력(예: 성별, 나이, 위치, 빈곤, 장애, 민족성, 원주민, 언어, 종교, 이주 또는 이주 상태, 이주 또는 이주 상태)을 포함해 전 세계 교육시스템에서 학습자를 배제하는 핵심 요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185개국에서 휴교를 하고, 학생의 91%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이 중단돼 학교에 가지 못하고, 최빈국의 40%가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학습자를 지원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를 재조명하고, 전 세계 학생 인구의 90%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폐쇄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러한 교육 불평등의 확대 심화는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아동, 청소년, 청년 5명 중 1명이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격차 및 디지털 격차는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하여금 더욱 학습 손실과 중퇴의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교육 행위자로 하여금 정체성, 배경 또는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를 포함하는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권고사항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의 사례를 바탕으로 훨씬 더 포용적인 공정정책 개발을 추동해가는 역할도 기대하게 된다.

'모두는 모든 이를 의미한다(all means all)' 취약계층 포용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돼 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보면 그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격차와 배제를 줄이고,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를 포용하는 세계로의 이동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교육에서의 포용은 종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교사의 몸짓에서, 학교 관리자들이 학습 환경을 위해 조성하는 학교 풍토에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모두는 모든 이를 의미한다(all means all)'라는 접근방식은 아동에게 붙여진 낙인(stigma)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꼬리표 때문에 일반교육 상황에서 배제한다면, 아동의 잠재력을 제한하여 다양한 학습 접근법이 모든 아동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제도를 설계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데, 국가는 교육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단편적인 접근방식으로 포용 의제를 다루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모든 과제를 정면으로 도전해 해결할 수도 있다(GEMS, 2020).

이렇게 사회경제적인 환경 차에 따른 학습 성과의 차이에 대한 쟁점 외에도, 학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적장애 학생은 교육에 있어 가장 극단의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원격교육 환경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발표했지만, 지적장애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인적 지원을 포함 국가와 학교의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했다.

장애학생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국내 온라인 수업 지원

학교마다, 지역마다 교육콘텐츠의 차이가 있고, 가정에서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자기주도적으로 학업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학업결손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교육부, 2020). 그간 국내 교육격차 연구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지역 간 교육격차,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혹은 북한이탈주민 학생과 같은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격차해소법 필요성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박혜경, 2017).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수업 준비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학습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으로 유형을 나눠 학교에서 적절한 방식을 택해 운영하도록 했고, 화상 회의, 교육 관리 시스템(LMS), 메신저 앱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안내해왔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해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 등 3대 교육안전망을 제안하면서, 장애 유형·정도,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제시형 원격수업' 등 수업을 진행했다.

EBS, 에듀에이블, 위두랑 등에 장애 학생용 자료를 탑재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가령,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자막지원 프로그램 소보로탭을 지원했고, 점자번역기를 비롯해 신체적 불편함을 도울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했다.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 1:1 방문교육, 학습꾸러미, 학교(급)별 특색 자료제공 등 학교와 학생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 유형과 정도가 천차만별이어서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특히 중복장애 학생들의 경우 장애 특성별로 개개인의 수준차가 커 원격수업으로 등교수업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소외나 교육격차를 겪고 있는 학교교육 테두리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령기 인구의 약 5%에 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대면 수업과 학습 격차의 원인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비대면 수업의 부작용은 생각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구, 2020). 202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원격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습격차 심화(61.8%)'이었다. 그리고 학습격차의 원인은 '가정환경 차이(72.3%)'가 1순위였다(경향신문).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이후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했다.

이렇게 학습격차가 커진 주된 이유는 1)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 2) 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 3) 학생-교사 간 소통의 한계, 4) 학생의 사교육 수강 여부, 5) 학습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 등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습능력이 좋거나 가정에서 학습할 환경이 잘 갖추어진 경우에는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습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5가지의 원인 중 3가지가 소득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요인이고, 공교육 시스템을 통한 대면 수업이 사라지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해 사회이동성이 저하되고, 이는 단순히 소득불평등을 넘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선발과 배치 저해, 기형적인 실업 확산, 경제성장 부진 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서영인 외, 2017), 학습불평등을 완화하는 기제로써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다(양정실 외, 2018).

사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출발선상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각자의 능력을 발굴하고 극대화하는 등의 본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비대면 교육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공교육의 역할과 기능 등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수업의 질을 담보하면서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학력 격차 해소와 정서·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안

문제는 학력 격차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수, 자살률, 자해·자살 시도자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취약했다.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진로 직업을 위한 여러 조건을 개선해야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정서·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 지원과 생활습관 교육 등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도록 할 것인지,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운동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이들이 비대면 대화방을 개설해 학습 외에도 취미와 주제별로 만나고 토론하게 하는 등 정서적 교감과 소통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회 곳곳에 여러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조금 더 학생 밀착형으로 다가가야 한다.

소외되고 정서·심리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둘러싼 부모,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교내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가정이나 학교 위기상황에서 출동할 수 있는 위기상담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소진된 교사를 위해서는 교직원 치유지원센터를 확대 강화하도록 하고, 학교 내외에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서·심리적 위기 지원을 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손쉽게 정보를 찾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